

# 보도자료



**기획재정부**  
MINISTRY OF STRATEGY  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0. 6. 17(목) 석간		
배포일시	2010. 6. 16(수) 19:00	담당부서	예산실 노동환경예산과
담당과장	우범기 과장(2150-7230)	담당자	김경국 사무관(2150-7231) 문희영 사무관(2150-7233)

## 제목 : “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” -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: 일자리 분야 -

- ☐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(KDI)과 공동 주관으로 6월 16일 학계·연구원 등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일자리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
  -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,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음.
- 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
  -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어 향후에도 취업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
  -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취업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재정·세제지원 정책도 좀 더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데 토론자들의 견해가 일치했음
- ☐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
  -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출현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을 다양화하고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함께
  -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·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

## 1. 발제자료 요약

### 【 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 】

#### 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 위한 정책 방향

- 일자리 사업이 지원하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
  - \* 실업자 일반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여성, 청년, 중·고령자, 자영업 등 계층별로 특화된 사업을 개발
- 훈련프로그램, 고용지원서비스, 고용장려금 등의 유기적 연계
- 유사·중복 사업의 검토, 사업재조정 등을 위한 총괄적 조정기능 및 평가체제를 강화
- ‘직접 일자리창출’, ‘고용 인센티브’의 투자 비중은 낮추고, ‘고용지원 서비스’, ‘교육훈련’, ‘창업 지원’ 등의 투자 비중 제고

####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핵심과제

- 구직·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고용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, 직업상담사 등 전문인력 양성 추진
-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, 근로형태 다양화,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한 중소기업 작업장 혁신 지원 강화
- 여성 경력단절 방지, 고령자 고용안정 등을 위한 단시간 근로 활성화
-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,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자영업자 대책 마련 필요

### 【 ②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 】

#### □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과제

-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비중을 줄이고, 간접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

- 인건비 전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회보험 가입 유도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
- 인건비 지원 종료시 급격한 고용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인건비 지원비율을 현재보다 더 차등화할 필요
  - \* 현재 인건비 지원 비율 : (1년차)90%, (2년차)80%, (3년차)70%
-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는 금융지원 수단 등과의 연계를 강화
- 취업취약계층을 일정기간 채용해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이전시키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검토

### 【③ 고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향】

- ①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용서비스 활성화가 중요
  - 그러나,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산업은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모두 전문성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
  -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일반적 실직자에 대한 기본적 고용서비스 제공은 공공부문의 기능으로 남아있고,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고용서비스는 공공부문과의 성과급 계약체계를 통해 민간부문이 수행
- ② 고용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
  - 요금제 등 고용서비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법규제 개선
  - 공공부문에서 고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기획하고,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추진
  - ‘우수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’ 등을 통해 선도기업을 육성하고,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

## 2. 토론 요지

### □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

-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 고용친화적 조세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, 고용안전망 강화 등도 중요한 정책 과제

### □ 김우영 공주대학교 교수

-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노동유연성 제고와 다소 상충되는 측면
-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며, 자영업자 지원은 영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

### □ 이은애 사단법인 Seed 사회혁신지원사업단장

- 사회적기업에 대한 연차별 인건비 지원 차등폭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
- 사회적기업이 시장의 틀 안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지원 등이 필요하며 금융지원은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주도 하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

### □ 이인재 한신대학교 교수

-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은 사회적기업의 혁신능력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,
-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시 중간 점검을 통해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

□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장

-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규모는 외국보다 낮지만 생산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고용서비스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
- 고용지원센터는 행정 기능보다 취업상담 등의 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

□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

-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가 영세한 고용서비스 기관의 난립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
- 직업훈련전 심층상담 등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해 과잉 직업훈련을 방지하고 지역 밀착형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고용통계 확충 필요

□ 우범기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

- 일자리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글로벌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크게 기여한 측면도 있음
- 사회적기업을 어느 수준까지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

□ 나영돈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

-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일자리 사업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
- 동 방안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국가 인력수급전망과 연계하고 단일화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임

## 기획재정부 대변인

## 〈 참고 〉 일자리 분야 사회자 및 토론자 명단

### □ 토론 주제

- 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
- ②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
- ③ 고용서비스산업 활성화 방향

### □ 사회자 및 토론자 명단

	성 명	소속 및 직위
사회자	남성일	서강대학교 교수, 노동경제학회장
발제자	금재호(①)	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
	김혜원(②)	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
	김승택(③)	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연구본부장
토론자 (10명)	강병구(①)	인하대학교 교수
	고혜원(③)	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
	김우영(①)	공주대학교 교수
	나영돈(①,②,③)	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
	신종각(③)	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장
	우범기(①,②,③)	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
	이은애(②)	사단법인 Seed 사회혁신지원사업단장
	이인재(②)	한신대학교 교수